

그린스쿨 ... 자재업계 새로운 블루오션

2012년까지 1조원 시장 형성 - 친환경 자재 사용 대폭 늘어

노 후된 학교시설을 친환경 기술과 건축자재를 사용해 개·보수하는 ‘그린스쿨(Green School)’이 건축자재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200개 초·중·고교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규모만 해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사업이어서 최첨단 건축자재의 사용 비중도 그만큼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2월 11일 착공한 경기도 광명시의 명문고와 용인시의 바이오고.

오는 3월 개교 전까지 학교시설의 내부를 친환경 건축자재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가로등, 지열·태양열 난방설비, 빗물이용시설, 심야전력, 원격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설치 △석면함유 텍스교체, 친환경 외장재, 천연 벽지·바닥재 사용 △생태연못 및 친환경 포장도로 조성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3월까지 학교시설 내부를, 4월까지 외

부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2012년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만큼 관련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밖에 전국의 각 지역 교육청도 올해 그린스쿨 대상학교를 선정,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업체들 역시 관련 영업인력 확충과 신제품 개발로 그린스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동화자연마루의 경우 그린스쿨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학교용 바닥재인 ‘스쿨’을 출시한 상태다.

인체 유해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는 수퍼E0등급과 E0등급의 제품만을 사용해 학교시설에 시공하고 있다.

특히 굽힘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 바닥의 특성을 고려해 7회 UV(자외선 차단) 도장으로 내구성도 높였다.

동화자연마루 영업팀 학교시설 담당자는 “학교시설 개축 수요는 동·하계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꾸준히 있어왔다”며 “최근에는 정부의 그린스쿨 사업으로 인해 제품의 친환경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시설당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평균 50억원으로 봤을 때, 그린스쿨의 총 사업규모는 1조원 정도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건축자재업체로써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PVC(폴리염화비닐)창호 전문업체인 대신 시스템 영업팀 관계자는 “학

건설소식



교시설의 경우 친환경성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에 맞춤형 제품인지가 중요하다”며 “두 조건을 충족시킨 다양한 제품을 앞으로 개발·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스쿨은?

정부가 마련한 녹색 뉴딜(New Deal) 정책의 하나. 교육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설이 노후된 학교를 선정, 학교시설을 친환경 건축자재 시공 및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설치를 책임진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별·추천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확정한다.

국가기술자격,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

노동부, 제2차 기본계획... 녹색산업·신성장동력 관련 종목 대폭 신설

|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3급 등 산업적으로 수요가 적어진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 전환되고 태양광발전·기상 감정·화재 감식 등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종목은 대폭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자격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현장 전문가의 시험출제 참여비율도 2012년까지 70%로 확대된다.

이명로 노동부 자격정책과장은 “현재 자격정책 과정에서 산업계의 참여가 미흡하고 검정방법이나 실기검정 시설과 장비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일선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격취득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우선 노동부는 자격증의 불법대여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 노동부는 선진국의 APEC engineer, ETME 등 다자간 협의체에 참여해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건설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능장 등급의 활용도 역시 높여나갈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가기술자격이 학력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PEC engineer : APEC 회원국 내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사가 상호 자유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간 다자협의체(한국, 미국, 호주 등 13개국 참여)

ETME :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자의 국가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협의체(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6개국, 우리나라 미참여)

대형병원 에너지효율 높인다

지경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등 추진

| 지 식경제부는 앞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대형병원에 대해 ESCO사업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병원의 에너지 사용량 조사결과, 상위 10개 병원의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평균은 74.9kgoe/m²로 상업용 건물 평균(35.6kgoe/m²)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냉난방 온도조절이 어려운 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에너지다소비 병원에 대한 효율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부터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된 병원 건물은 에너지 정밀진단을 실시해 낭비요인을 시정토록 유도하고, 특히 열병합 발전설비, 폐열회수장치, 건물 단열성능 개선 등 연중 열사용량이 많은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ESCO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은 전문업체가 특정건물이나 시설에 등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후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 기간 상환받도록 하는 제도다. ESCO 업체는 투자비용을 정부에서 설치한 에너지합리화자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제 도입

국토부 “소송 남발은 낭비” 위원회 구성 사전 중재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자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함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업계, 학계, 법조계 등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르면 이번 3월부터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한국 시설안전공단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무국을 설치해 구체적인 실무를 위임하고, 하자 판명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부 변호사와 안전진단업체 주도로 제기되고 있는 악의적 하자 관련 법정 소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주택사업자와 입주민들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미국 대통령의 죽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끝자리 숫자가 0인 해에 당선된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

1860년에 대통령이 된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연방제를 확립했으며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노예제도 폐지에 반발한 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1880년에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제임스 A. 가필드는 의욕적인 정치를 펼치려고 했지만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암살당했다. 1900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윌리엄 매킨리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하와이를 병합했지만 무정부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했으며, 1840년에 당선된 벤저민 해리슨, 1920년에 당선된 워런 G. 하딩, 1940년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등은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병사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